

당신은 중산층입니까?

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?

일시 : 2014.12.24(수), 07:30~

장소 : 의원회관 211호(8간담회실)

민주정책포럼 Season II

‘당신은 중산층입니까?’

□ 취지 및 목적

- 4·16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적 요구 확산에 따른 방향 모색 및 학습의 장 마련
-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경제적 계층갈등의 현실과 원인 진단, 사라진 중산층 복원,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및 복지확대 방안 논의

□ 포럼 개요

- 일 정 : 2014.12.10(수)~, 07:30~09:00 [매주 수요일, 총 3회]
- 장 소 : 국회본청 귀빈식당/의원회관 211호실
- 대주제 : 당신은 중산층입니까?
- 주 최 : 민주정책연구원
- 참 석 : 당 지도부, 국회의원, 지역위원장, 정책위원회 및 당직자

□ 프로그램

일시	분야	강연 주제 및 연사	지정토론	장소
12. 10(수) 07:30~09:00	정치	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? 강원택(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)	김기준 의원 오영식 의원	국회본청 귀빈식당 (1호실)
12. 17(수) 07:30~09:00	사회	② 한국사회,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! 이재열(서울대 사회학과 교수)	최원식 의원 황주홍 의원	의원회관 8간담회실 (211호)
12. 24(수) 07:30~09:00	복지	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? 안상훈(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)	김용익 의원 윤호중 의원	의원회관 8간담회실 (211호)

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- 당신은 중산층입니까?
시리즈 ③ ‘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’

□ 개요

- 일 시 : 2014년 12월 24일(수), 07:30 ~ 09:00
- 장 소 : 의원회관 211호(8간담회실)
- 주 최 : 민주정책연구원

□ 강연 주제

-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?

□ 초청 연사

- 안상훈 (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)

□ 진행 순서

사 회 : 이 범(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)	
시 간	내 용
07:30 ~ 07:45	개 회
07:45 ~ 07:50	인사말 :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
07:50 ~ 07:55	축 사 :
07:55 ~ 08:20	강 연 : 안상훈 교수
08:20 ~ 08:55	지정토론 : 김용익 의원, 윤호중 의원 자유토론 : 참석자 전체
08:55 ~ 09:00	폐 회



첫번째 질문
**“복지 확대가 필요한 중요한
이유들은 무엇인가?”**

복지반대론 설득의 기초

경제적으로, 고장 난 자본주의의 3가지 難題를 풀기 위해서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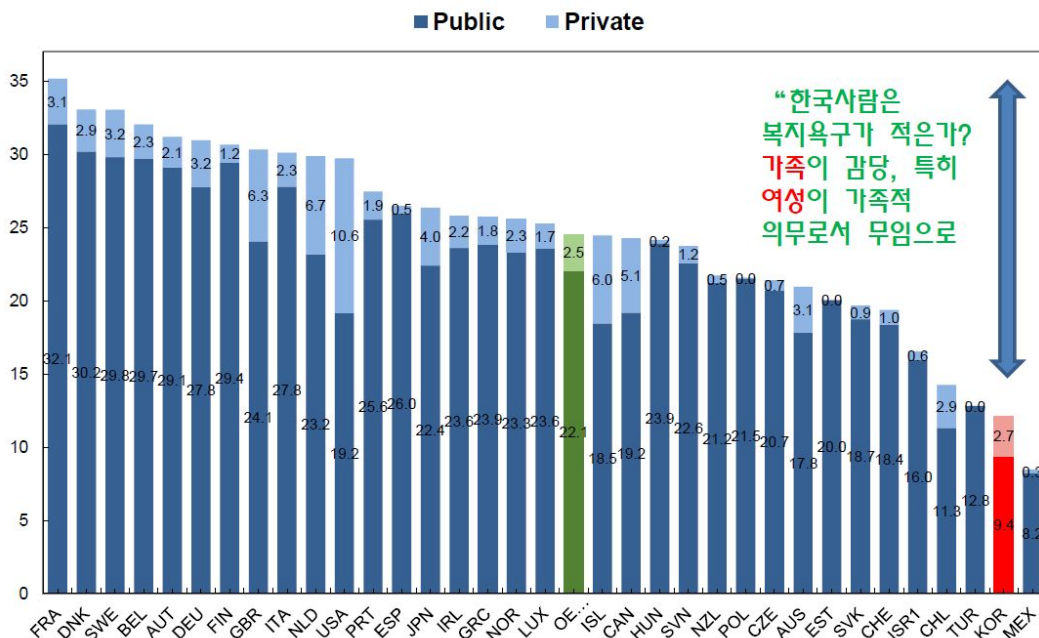
- “고용 없는 성장”
 -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는 혁신이 관건
 - 기술중심의 지식산업화, 첨단산업화와 “노동의 종말”
- “양성불평등”
 -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부장주의의 지속
- “양극화”
 - 슈퍼리치의 출현과 계층상승의 종언
 - 중산층의 감소

→ 불평등과 양극화만이라면 전통적인 소득보장으로 가능 but, 고용 없는 성장과 양성불평등도 동시에 풀어야...

→ “새로운 복지국가 전략=사회서비스 강화전략” 이 필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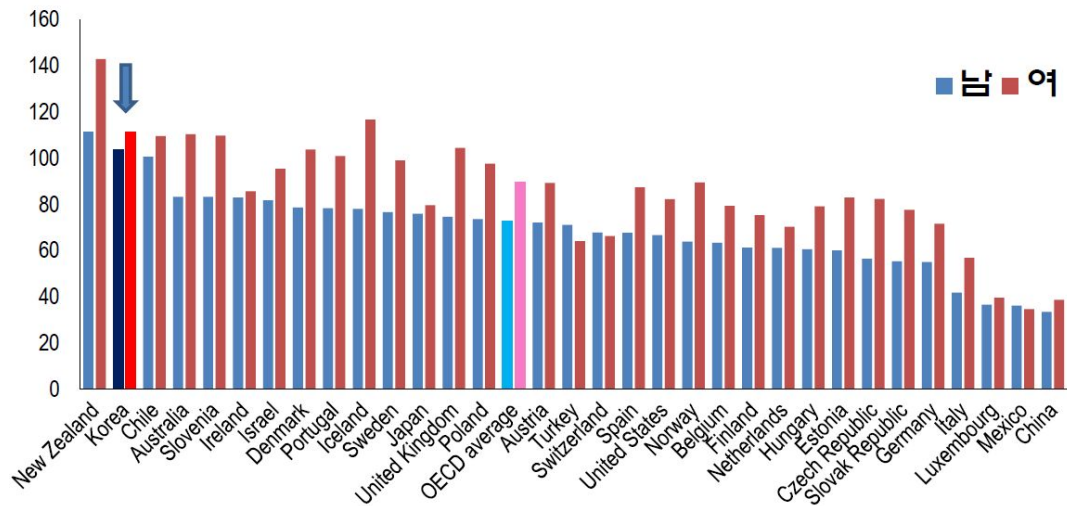
소득보장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한국 복지의 그늘: 가족과 여성

공공 민간 사회지출 (% GDP, 2009)



남녀 똑같이 공부시켜놓고...

성별 대학진학률 수준(2010, Tertiary-type 5A, 5B Total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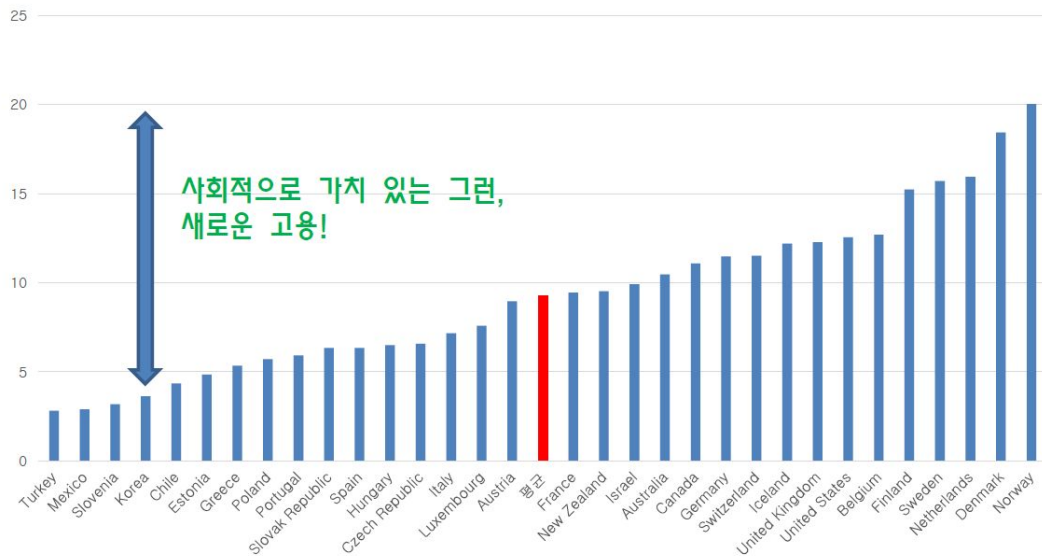
여성은 배제하는 잘못된 자본주의...

고용률: 남성(상) 여성(하)



하지만, 사회서비스강화로 고용창출, 특히 여성고용 확대가 가능하다!

건강 및 사회 고용(2008), 단, Chile 2011, Greece, Poland 2007, France 20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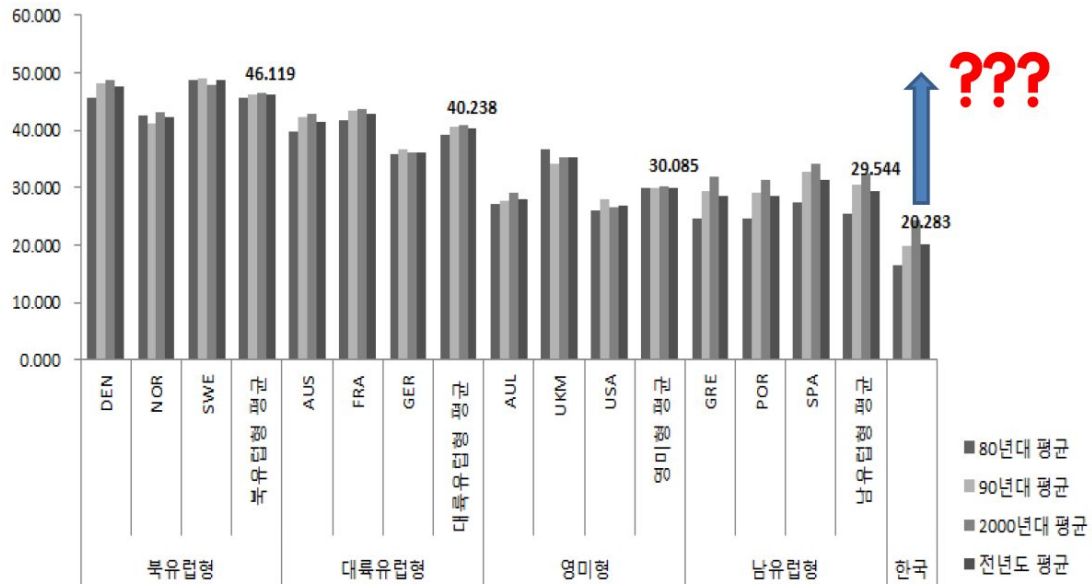


두 번째 질문: “큰 복지, 국민정서상 가능한가?”

예산제약에 관한 현실적 기초

필요한 “중세”, 생각만큼 간단할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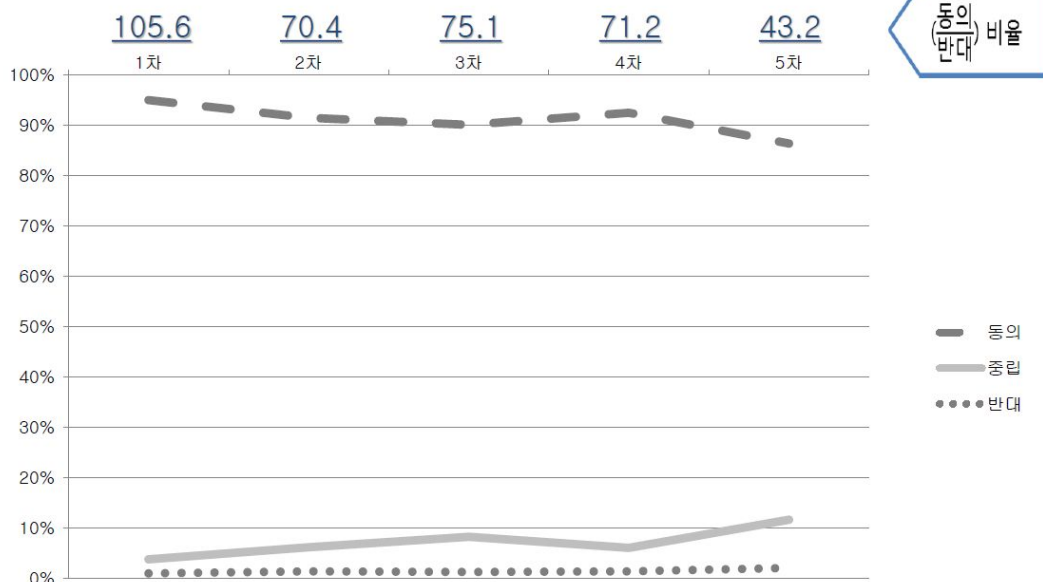
주요국 국민부담률(GDP%) 출처: OECD Tax statistics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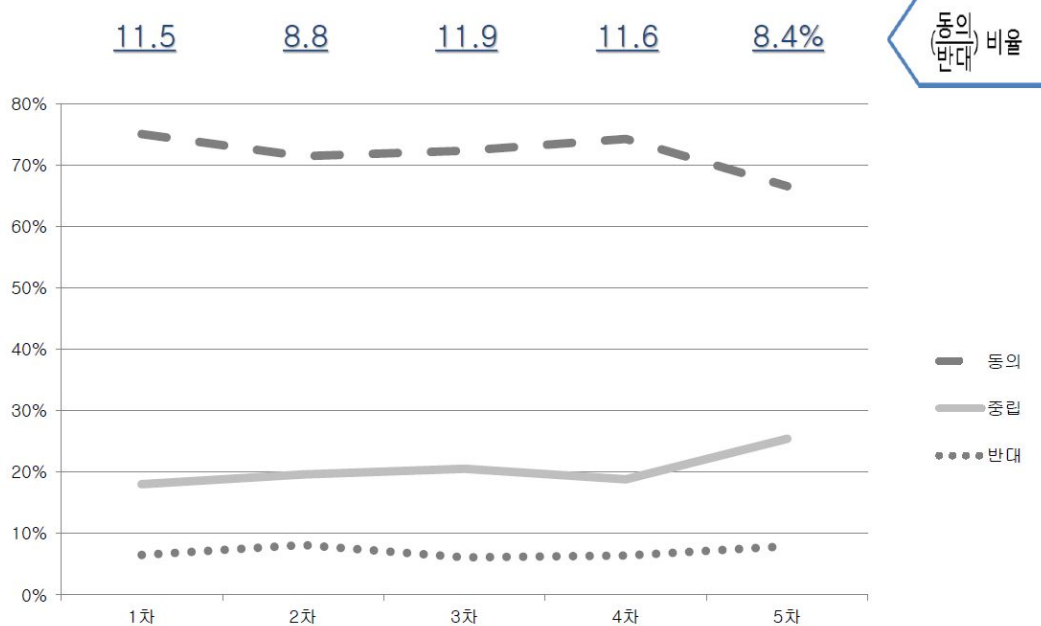
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개요

구분	1차(06년)	2차(08년)	3차(10년)	4차(12년)	5차(14년)
모집단	만 20세 이상	전국(제주도 포함)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			
표본크기	1,202명	1,207명	1,209명	1,200명	1,205명
표본할당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	2006.10. 기준	2008.10. 기준	2010.10. 기준	2011.10. 기준	2013.11. 기준
표본추출방법	다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법				
표본오차	± 2.8%(95% 신뢰수준)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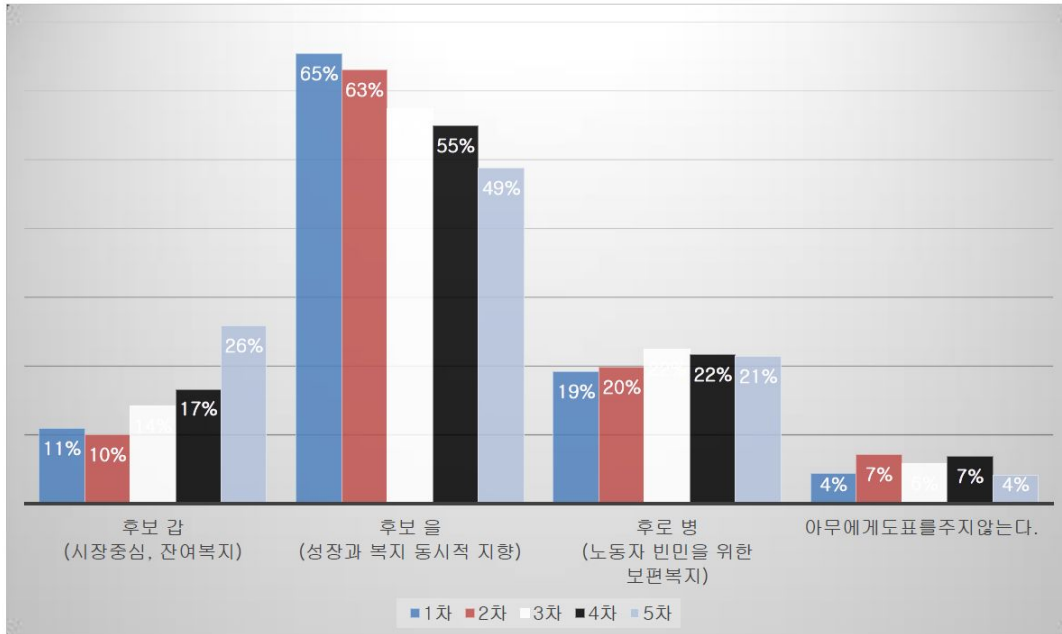
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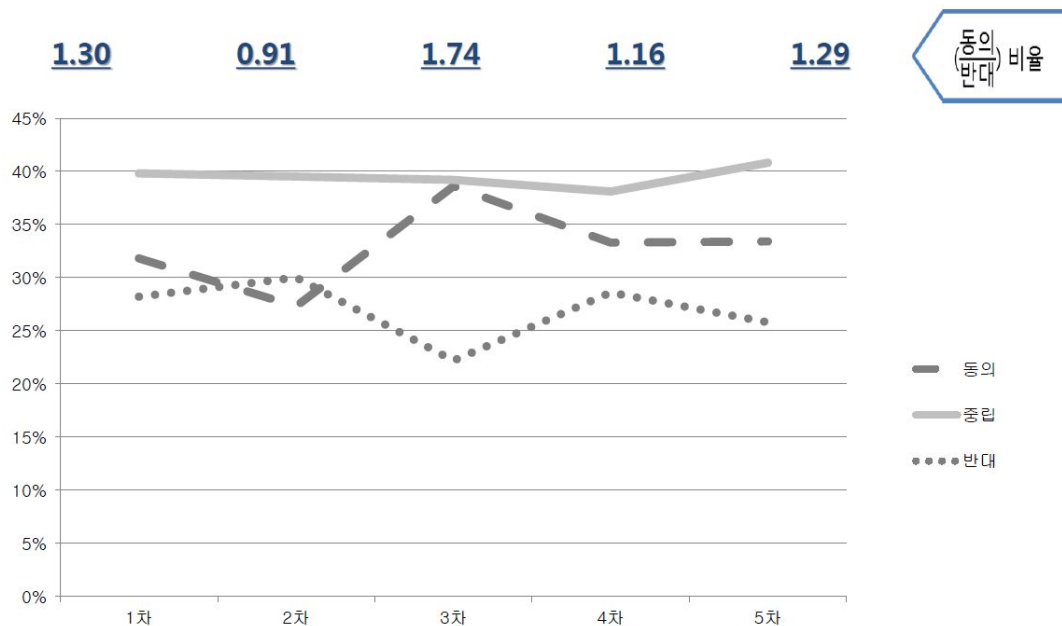
소득격차는 정부책임이다!



전반적 중도성향 & 잔여복지 증가



복지중세 찬반 팽팽, 동의 낮아짐



선별적 복지 지지 상승경향

0.9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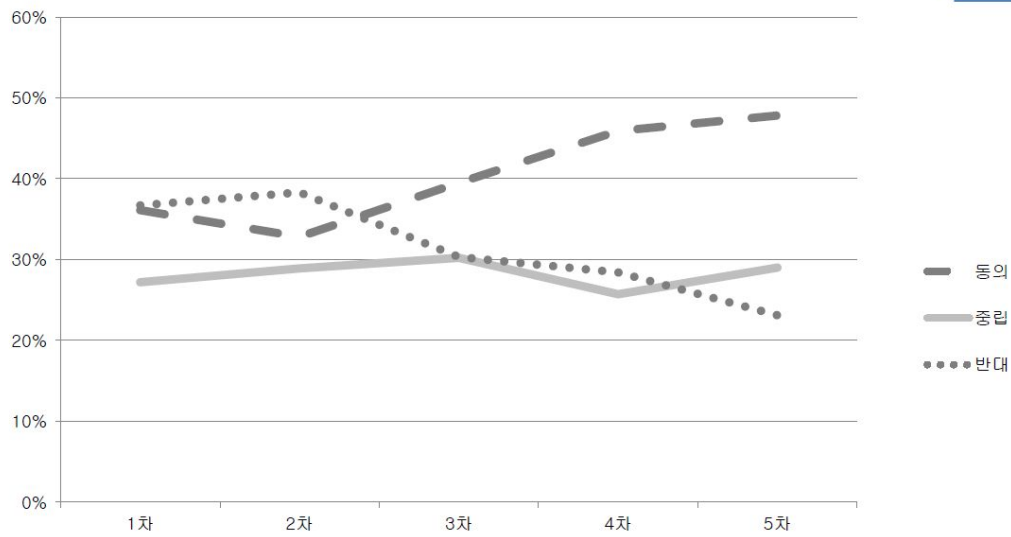
0.86

1.30

1.62

2.07

동의
(반대) 비율



무상 대학교육 반대도 늘고 있음

1.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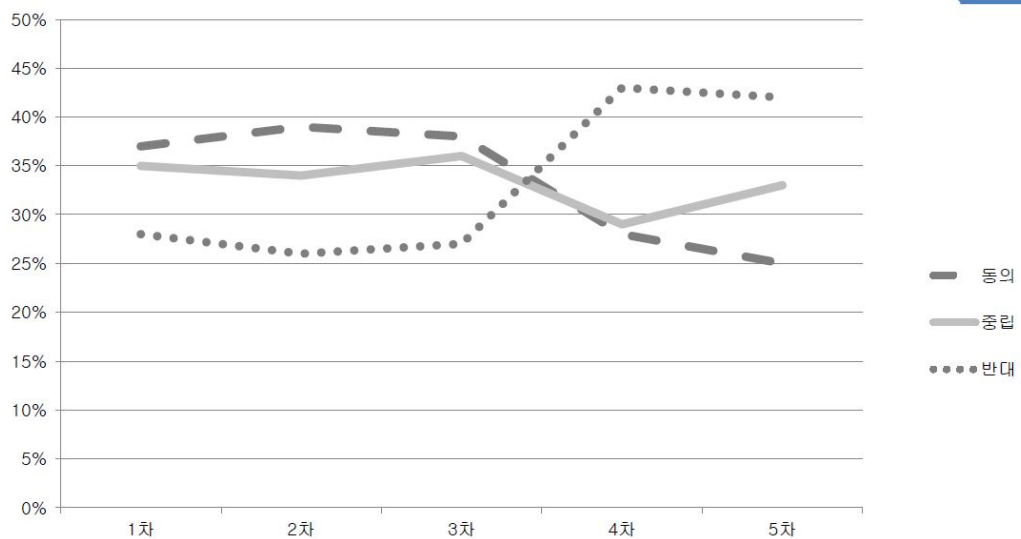
1.49

1.42

0.65

0.59

동의
(반대) 비율



세 번째 질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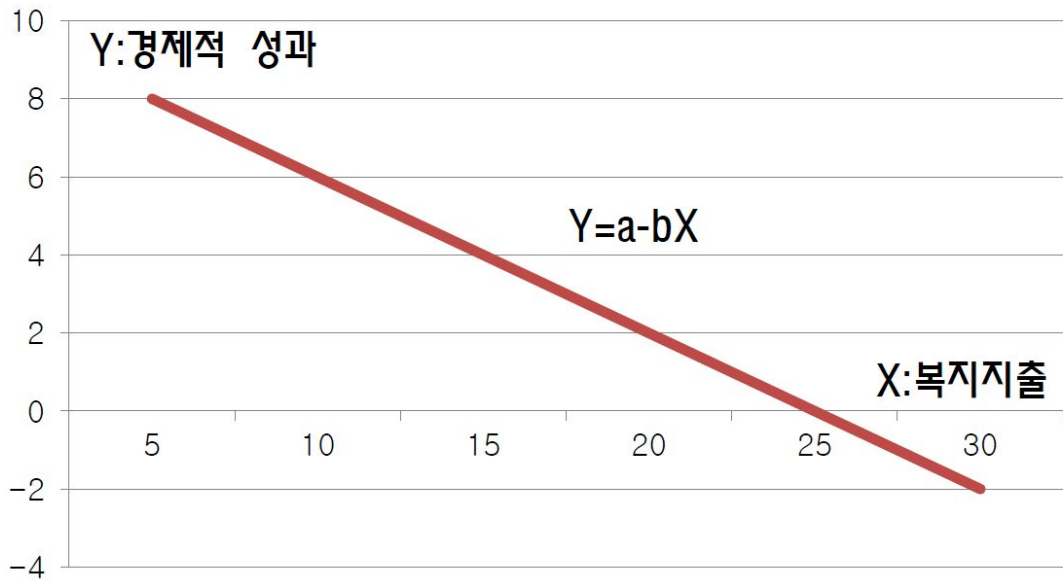
“예산 제약이 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복지 먼저 챙겨야 하나?”

사회서비스전략의 경험적 기초

“사회서비스 전략”

- 복지국가모형은 **실현가능**하고 **지속가능**해야 함
 - 복지국가의 확장은 여전히 필요, 예산 제약 아래서 어떤 복지에 먼저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질문!
-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, 동일욕구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?
 - 경험연구에 의하면, 사회서비스를 강조하는 모형에서 정치, 경제,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음
- 20세기형 **소득보장(현금복지)**
 - 21세기형 **생활보장(현금+서비스복지)**으로 전환
 - 현금급여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고
 -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확대로
 -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, 노인, 장애인 **고용증대**
 - 보육 간병 교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**복지욕구에 부응**

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유럽병 가설에 관한 사회정책학적 반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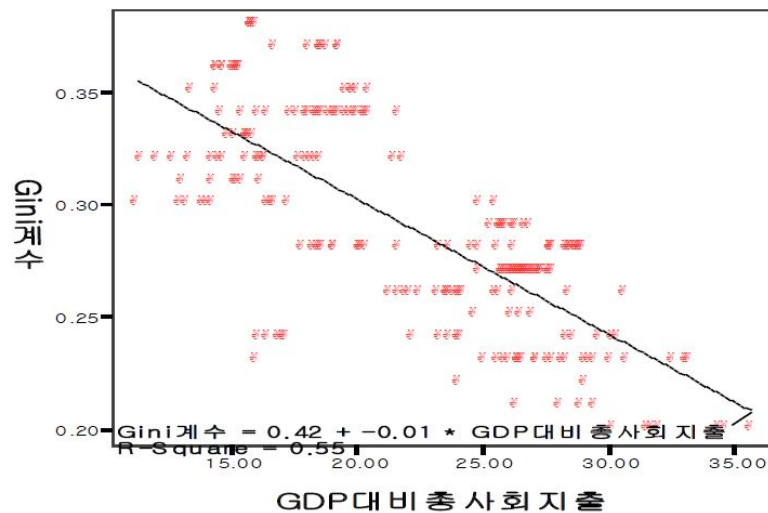


‘복지병’ 혹은 ‘유럽병’ 이 사실일까?

복지를 늘려야만 불평등 제거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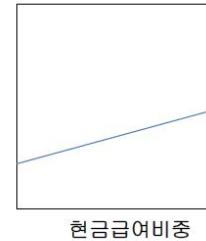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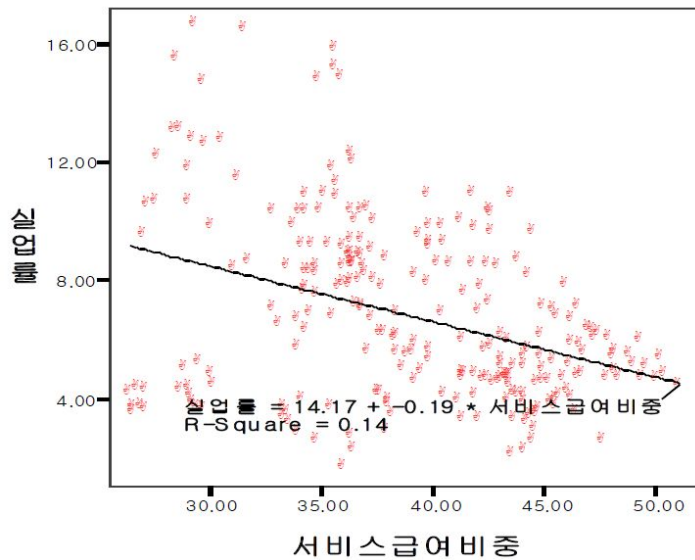
지니계수(중사회지출)

총 사회 지출-Gini계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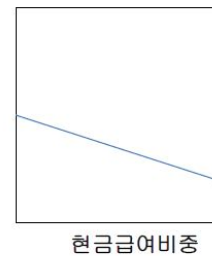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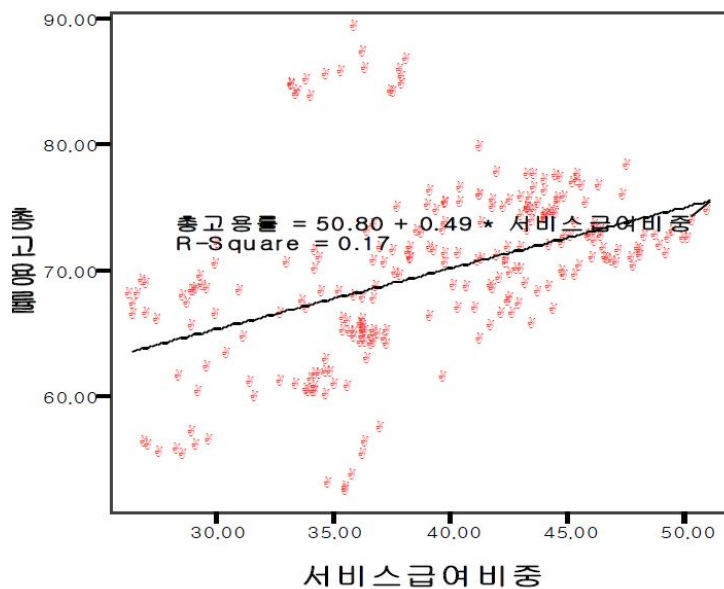
복지 중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실업률을 낮추고...

서비스-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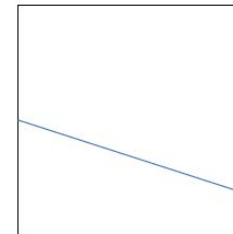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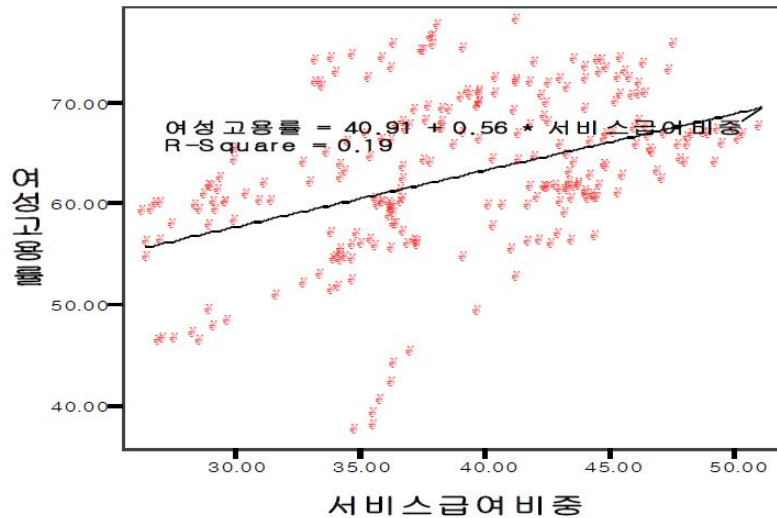
고용률을 높이며...

서비스-총고용률



특히, 여성고용률을 확 높인다!

서비스-여성고용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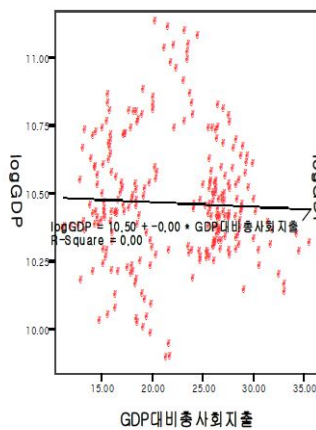
현금급여비중

현금복지는 복지병과 관련, but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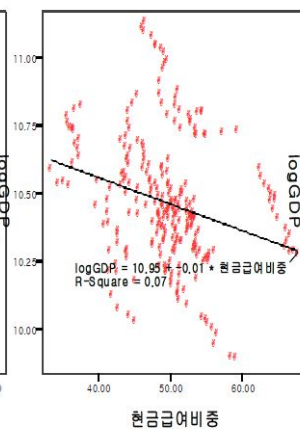
“사회서비스”는 성장친화적!

로그실질GD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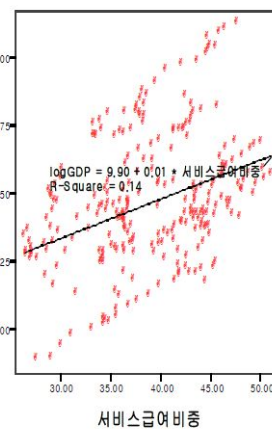
총사회지출-로그실질GDP



현금-로그실질GDP



서비스-로그실질GDP



사회서비스 전략이 성장을 높이는 이유...

$$\text{생산함수} = f(\text{자본} + \text{노동} + \text{토지} + \text{기술} \dots)$$

사회서비스전략, 중산층도 더 키운다! why? 현금복지=실업/연금보험→기득권에 유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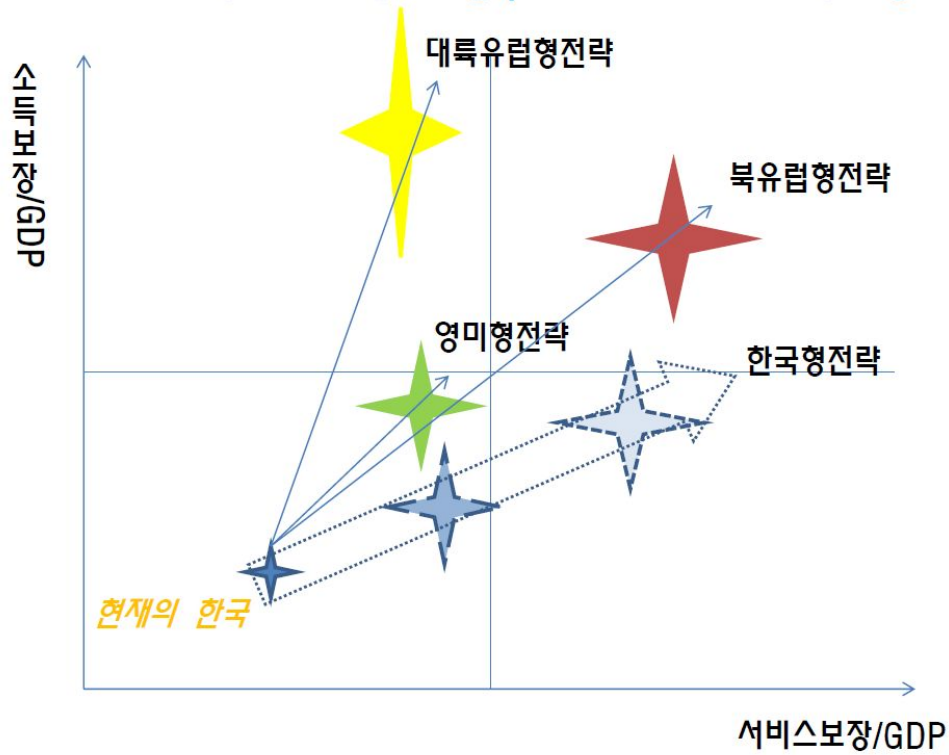
국가	중산층 가구비중 I*	중산층 가구비중 II**
스웨덴	52.7	75.8
노르웨이	45.3	70.5
독일	43.9	66.5
프랑스	39.4	62.5
영국	32.6	56.3
미국	27.3	50.4

- 출처: Luxemburg Income Study(WAVE 4)
- 주: *중산층 가구는 중위가구소득의 75%에서 125%사이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함;
**중산층 가구는 중위가구소득의 75%에서 200%사이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함

방향성: 현금=선별, 서비스=보편

- 예산 제약 下, 현금복지의 취약계층우선 원칙
 - Deserving poor에 대한 지원강화(교,주,의,생 개별급여+추가급여, 부양의무제축소 등)
 - 공적연금급여 재정안정화(특수직역연금개혁, 건강수명연동수급 개시연령 등)
- 서비스복지를 통한 고용활성화 원칙
 - 여성: 저소득여성 사회서비스일자리+고소득여성 시장참여
 - 노인: 정년연장, 임금피크, 노인일자리, 경력2~3모작 등 지원
 - 장애인: Samhall 방식의 보호된 노동시장
 - 적응적 유연적 자본주의4.0 시대의 민관협력: 사회적경제

결론: 현금복지=취약계층, 서비스복지=중산층



감사합니다